

# 노조 10억 지원·근로시간 면제 초과 등 위반사업장 39곳 적발

고용부, 62개소 집중점검 중간결과 부당노동행위·위법 단체협약 등 교섭기간 전체 유급처리 편법도 노사법치, 합리적 관계 구축 토대 이달까지 약 140개소 감독 지속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 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 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해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암체 주유소 단속”

산업부, 관련부처와 현장점검 착수 연말까지 6000곳 대상 특별점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암체 주유소 단속을 위해 발족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첫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강경성 2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관련 민생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첫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첫주부터 4주 연속 하락 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2일 리터당 1796원에서 10월 31일 1747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도 리터당 1699원에서 1676원으로 하락했다.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답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현장 주유기 대상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6000곳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하고,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정부, 김장재료 비축물량 2만여톤 공급

배추·무 공급 감소에 1.1만톤 방출 천일염 1만톤 할인 공급... 역대 최대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 내 채소 진열대

/뉴시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1만톤을 비롯해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 비축물량 2만여톤을 공급한다. 예비비 245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3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농수산물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달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조사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김장 재료 등의 가격상승 요인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상존한 상황이다.

주재료인 배추는 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고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

황이다. 다만 소금과 고춧가루, 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1만 1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해 소비자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 24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김장재료 구매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 중진공-두산, 中企 ESG 공급망 지원

협력 中企 ESG 역량 선제적 강화 전문가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 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두산과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지난 1일 두산과 서울 동대문 두산 본사에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은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ESG·탄소중립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과 박영호 두산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협력 우수기업에 후속연계지원 제공 ▲ESG·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 ESG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ESG·탄소중립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역량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두산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협력기업에 ESG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별 영위업종·생산공정 등을 고려해 협력기업 임직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동대문 두산 본사에서 두산 박영호 부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의 생산·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시행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위험은 물론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기업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합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망 ESG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ESG 지원을 위해 민간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ESG 애로사항을 앞으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